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8. 4.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교류 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 [이라크 공무원 “부패한 정치인과 테러리즘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1
- ☐ [미얀마,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3
- ☐ [옥스팜 인터내셔널 회장 부패혐의로 과테말라에서 체포](#) 4
- ☐ [우크라이나 대통령, IMF의 반부패재판소 설치 요구 거부](#) 6
- ☐ [미국 SEC, 메릴린치 내부고발자들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지급](#) ... 8
- ☐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리비아 뇌물수수 관련 비리혐의에 직면](#) .. 10
- ☐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 부정부패 혐의로 사임](#) 12

II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 [사우디아라비아는 부패척결 운동에서 한국을 배워야](#) 15
- ☐ [한국: 반부패 호랑이](#) 18

III 국제회의 동향

- ☐ [‘18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20
- ☐ [제26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22
- ☐ [‘18년 제1차 OECD 청렴직업반회의, 청렴 포럼 및 청렴네트워크 워크숍](#) .. 24

IV 옴부즈만 소식

- ☐ [IOI: 신임 유럽 지역 이사 선출](#) 27
- ☐ [포르투갈: 신임 포르투갈 옴부즈만 취임](#) 28
- ☐ [캐나다 토론토 공공임대주택 우선 이전절차는 세입자에게 헛된 희망만 준다](#) .. 29
- ☐ [호주: 2014년 의회 직원에 배정된 예산 오남용](#) 31
- ☐ [영국: 국민건강보험,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환자 보호 실패](#) .. 33
- ☐ [캐나다: 지방 및 대학 옴부즈만, 캠퍼스로 관할권 확대](#) 35

V 참고자료

-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부패지수](#) 40
- ☐ [2017년 부패인식지수](#) 50
- ☐ [공공청렴성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65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이라크 공무원 “부패한 정치인과 테러리즘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Arab News, 2018.1.6)

- 이라크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은 목요일 아랍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부패가 IS와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끔 방패막이 되었다고 말했다.
-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상 이라크의 국가안보와 정치적 안정성이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 이라크는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라크 의회 청렴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12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이 횡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2014년 6월 이라크 군대가 IS에 무너지면서 이라크 북쪽과 서쪽의 3분의 1을 IS가 점령했다. 당시 재정 및 행정적 부패로 인해 국가 안보가 취약해져서 발생한 결과이다.
- 이라크 의회 안보 및 국방 위원회에서 진행한 8개월간 수사 끝에 2015년 8월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모술의 주민에게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핵심 문제가 바로 재정적·행정적 부패였다.
- 부패 때문에 2014년에 IS가 모술과 교외지역 도시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무능한 지도자를 임명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안보국을 총괄하는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는 모술을 IS세력에 빼앗긴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
- 하이더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11월 말에 반부패 캠페인을 실시했다.
-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들, 국가 자금을 횡령한 사람들이 이런 참사 (모술과 다른 도시가 IS한테 점령당한)의 원인이다”라고 저번 주 트위터에 올렸다.
- “부패 때문에 IS가 이라크 도시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라크 의원들에 의하면 테러리스트에게 재정적·행정적 부패가 방패막을 제공한 것이지 테러리스트가 등장해서 부패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탈랄 알주바이 청렴위원장은 “IS가 등장하기 전부터 여기 세 도시(IS가 점령한 세 곳)의 주지사들이 국가 예산을 횡령 했다는 증거는 많았다.”라고 말했다.
- “주지사들의 횡령 범죄가 밝혀지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모든 것이 IS의 탓인 것처럼 위장하려한 부패 때문에 이런 무장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라고 알주바이 위원장은 이야기했다.
- “부패한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속시켜 무장세력이 횡행하도록 하는 데 부정부패가 방편이 된 것이다”고 알주바이 위원장은 말했다.
- 2004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개설된 청렴 위원회의 전 위원장을 맡았던 모사 파라즈는 아바디와 알주바이의 의견에 동의한다.
- “이라크에서 정치인과 테러리즘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부패라는 것은 자금이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고 파라즈는 이야기했다.
- 파라즈는 “정권을 잡으려면 활동 거점, 무기, 자동차, 민병대, 방송채널, 수천 명의 추종자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려면 매달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이래 이라크의 모든 정당이 부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 원문기사 : Corrupt politicians and terrorism directly linked in Iraq, say officials (Arab News, Jan. 6, 2018)

미얀마,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XINHUA, 2018.1.23)

- 화요일 Global New Light of Myanmar의 보도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의장은 뇌물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패는 우리 공동의 적이라고 했다.
- 월요일 양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아웅 키 의장은 미얀마에서 뇌물수수, 부도덕성, 위법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2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부패와의 전쟁은 특히 뇌물수수와 위법행위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 변화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2개년 계획 목표 중 하나가 부패를 혐오하고 거부하도록 하여, 사회에서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규정과 원칙을 토대로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명민한 대응을 강조했다.
- 이날 기념식은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라는 주제로 부패방지위원회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2018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 2017년 11월 30일 개설된 이래 부패방지위원회는 전국적으로 4,516건의 신고를 받았다. 정부의 행위, 행정상 오류, 토지 관리, 사법 사건, 토지 취득, 권한 남용, 뇌물, 고의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이다.
- 미얀마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 및 동남아 국가 반부패연합(SEA-PAC) 당사국이다.
- 나아가 미얀마는 부패 척결을 위해 태국 및 베트남과 MOU를 체결했다.
- 미얀마의 부패방지법은 2013년 9월 효력이 발생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2014년에 설립되었지만 2017년 11월에 재정비되었다.

※ 원문기사 : Myanmar declares war against corruption (XINHUA, Jan. 23, 2018)

옥스팜 인터내셔널 회장 부패혐의로 과테말라에서 체포 (The Guardian, 2018.2.13)

- 후안 알베르토 푸엔테 옥스팜 인터내셔널 회장은 과테말라 재무장관 재임 기간 동안의 부패혐의로 과테말라에서 체포됐다.
- 과테말라 법무장관은 현재 점점 심각해지는 성적 학대 스캔들에 휘말린 옥스팜의 푸엔테 회장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이번 혐의는 옥스팜 회장직과는 무관하지만, 옥스팜의 고위인사 임명에 대한 실사 논란은 물론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옥스팜 고위경영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 2015년 옥스팜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임명된 푸엔테 회장은 과테말라 전 재무장관이었다.
-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리브레 보도에 따르면, 트랜서바노로 알려진 과테말라 도시 대중교통 체계 관련 부패 혐의로 화요일에 푸엔테 회장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0명이 체포됐다.
- 푸엔테 회장이 체포된 직후, 검사는 과테말라 시내버스 구매 관련 수사를 위해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 푸엔테는 정계와 재계에서 모두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장관을 맡기 전에 푸엔테는 중앙아메리카재정연구소 창립자이자 소장이었다.
- 푸엔테 회장 사건은 과거 전직 장관들이 줄줄이 체포될 정도로 과열된 과테말라의 정치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미 고위인사 면직과 관련한 부정 혐의와 아이티 지진 재난이 한창일 때 성매매 혐의를 받으며 타격을 입은 옥스팜 인터내셔널을 다시 한번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티 대통령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옥스팜을 비난했다. 옥스팜은 2011년 아이티 지진사태 처리에 대해 정부, 기부자, 후원자, 아이티 국민에게 전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 옥스팜 대변인은 “우리가 알기로 푸엔테 나이트 박사는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옥스팜 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시작된 수사에 대해 이사회와 임원진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공개해 왔다.”
- “푸엔테 나이트 박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다. 본 수사는 푸엔테 박사가 과테말라 전 재무장관 재임 당시 집행한 예산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Chair of Oxfam International arrested on corruption charges in Guatemala
(The Guardian, Feb. 13, 2018)

포르센코 대통령, IMF의 반부패재판소 설치 요구 거부 (Financial Times, 2018.3.6)

- 키예프에서 독립적인 반부패재판소의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중요한 자금조달이 지연되는 가운데 페트로 포르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원조 공여국이 자국의 법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서구의 지원국과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과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의 도둑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에 만연한 뇌물을 척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 내년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판소 설치 계획은 포르센코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명이다.
-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포르센코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 노력을 강력하게 대변했다.
- IMF와 헌법적 자문역할을 하는 베니스 위원회에서 원조의 대가로 반부패재판소 판사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여국이 우크라이나 재판소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 포르센코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반부패재판소 관련 법안이 의회 1차 심의를 통과한 목요일에 이 같이 발언했다. 의회가 수정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포르센코 대통령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확실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했다.
- 포르센코 대통령은 수정법안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부합한다면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제정된 법을 정지 혹은 폐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끔찍하다.”며 “재앙 같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했다.

- 반부패 운동가들은 키예프의 정치 지도자들 자신이 반부패 재판소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의적으로 재판소 설치를 지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키예프에 소재한 반부패 행동센터의 다르니아 칼렌유크 소장은 “반부패 재판소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수백만 또는 수천만 흐리브나 (우크라이나 통화) 정도의 국가 자금을 횡령하는 고위층 인사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재판소 관련 논란과 더불어 과거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가정용 연료비의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IMF 지원금 19억 달러의 지급이 미뤄진 상태이다.
- 우크라이나는 11개월 연속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못했으며, 4개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계획된 총 금액 175억 달러의 절반밖에 지급 받지 못했다.
- 포로셴코 대통령과 주류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여 미래를 위한 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
- 일부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연료비 인상 등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사안에 대해 심한 압박을 가하는 IMF를 조용히 경고하고 있다.
- 포로셴코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선거와 상관없이 의료보험, 교육 및 연금제도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군대 및 국가안보 정비,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관의 설립,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는 IMF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 개혁할 것”이라고 전했다.

※ 원문기사: Poroshenko fends off IMF demands for anti-corruption court (Financial Times, Mar. 6, 2018)

미 증권거래위원회, 메릴린치 내부고발자들에게 역대 최고액인 8,300만 달러 보상금 지급 (REUTERS, 2018.3.20)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와의 2016년 합의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세 명에게 역대 최고액인 8,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었다고 내부고발자의 변호사가 월요일에 말했다.
- 월요일에 SEC는 보상 규모를 발표하였으나 두 명의 내부고발자에게 5,000만 달러를, 나머지 한명에게는 3,300만 달러를 보상하게 된 사건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자들을 대변하는 로펌에 의하면 고객 자금을 오남용했다는 정보를 SEC에 제공했다고 한다.
- 로펌 라바톤 슈샤로우의 변호사 조던 토마스는 성명을 통해 “저희 고객들은 월스트리트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SEC의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게 된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한 용기 있는 직원 덕분에 수백만명의 메릴린치 고객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벌금 4억1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메릴린치는 예비자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돈을 관리목적용 임시계정에 일일 최대 580억 달러까지 보관했다며 고객자금을 오남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SEC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복잡한 옵션거래를 통해 고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예비자금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이런 행위로 매주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풀어서 일부 해당 기간 중 메릴린치의 거래활동에 자금을 댄 것이다.
- 메릴린치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본 고객이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릴린치 대변인은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012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SEC는 현재까지 53명의 내부고발자에게 총 2억6200만 달러 이상 보상금을 지급했다. 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하여 SEC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회수한 금액의 10~3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인 노르버그 SEC 내부고발자 본부장은 “금번 보상금 지급이, 증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SEC에 신고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U.S. SEC awards Merrill Lynch whistleblowers a record \$83 million (REUTERS, Mar. 20, 2018)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리비아 뇌물수수 관련 비리혐의에 직면
(The New York Times, 2018.3.21)

- 2007년 당시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알 카다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 받은 혐의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수사가 요청되었다.
-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낭테르의 경찰이 2일차 심문을 마친 후,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변인에 의하면, 사르코지(63)는 뇌물수취, 불법 선거자금조달, 리비아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 뇌물수취 혐의는 돈이나 특혜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 경찰은 사르코지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사법적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법률상, 사법적 통제는 출국금지 등 수사 기간 중 피의자에게 다양한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데,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2013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번 기소는 중대한 발전이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2011년 축출되고 살해당하기 이전 카다피 정부에 참여했던 사르코지의 보좌관 및 지지자들, 카다피와 사르코지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과 관련된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재정적 관계의 그물이 천천히 풀리고 있다.
- 동 사건을 낳게 된 의혹은, 2012년 미디어파트라는 탐사뉴스 웹사이트에서, 사르코지가 2007년 선거운동 당시 카다피 정부로부터 약 5,000만 유로(현재 환율로는 62백만불)를 받았다고 할 때 부상했다. 그 이후 프랑스 언론은 다양한 인물에 대해 보도를 했다.
- 프랑스에서 복잡한 형사사건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받은 치안판사들이 담당한다. 치안 판사가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공식 수사를 받게 된다.
- 그러나, 자동으로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사가 종결 시까지 수집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치안판사는 사건을 취하할 수 있다.

-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이후 사르코지는 여러 부패 수사에 직면해 왔고, 이들 사건은 여러 수사 단계에 있으며, 사르코지는 시종일관 본인의 결백함을 피력해왔다.
- 베텐코트 사건이라고 불리는 2007년 선거운동 당시 로레알 상속녀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도록 조작한 소송은 취하되었다. 이처럼 취하된 사건도 있다.
- 하지만 여전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많다.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 선거운동 당시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2012년 재선에는 실패했다. 정계에서 은퇴한 사르코지는 2017년 대선을 목표로 우파인 공화당에서 재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 그러나 여전히 사르코지는 공화당에서 영향력이 있고, 공화당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당내 고위 인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르코지를 찾고 있다.
- 지난 이틀간 사르코지가 낭테르에서 조사 받는 동안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사르코지를 대변하면서 사르코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원문기사 : Nicolas Sarkozy, Ex-President of France, Faces Corruption Charges Over Libyan Cash (The New York Times, Mar. 21, 2018)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 부정부패 혐의로 사임 (The Washington Post, 2018.3.21)

-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후 민주적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한 미주 정상 회의에 참가하려는 가운데 부정부패 혐의로 휩싸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이번 수요일에 사임했다.
- 쿠친스키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사임을 발표했다. 부정행위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 쿠친스키 대통령은 남미 전역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 스캔들에 연루되어 몰락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한명이다.
- 월스트리트 은행가였던 79세 쿠친스키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직을 맡기 전 페루에서 여러 고위 정치직을 맡았다. 목요일부터는 쿠친스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
- ‘오데브레시’ 로비 활동에 대한 사실이 공개되자 그의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페루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 비공개 의회청문회 직전 쿠친스키 대통령은 오데브레시 자회사로부터 “언어적” 상품과 “네트워크”의 대가로 70만 달러 가까이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이전 총리직과 경제장관직을 수행한 이후에 받은 뇌물이다. 많은 페루 국민들은 이를 뻔뻔한 이해충돌로 여기며, 일각에서는 이 행위가 영향력 행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이와 별개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몇 명의 의원이 ‘탄핵 반대’표의 대가로 다른 의원들에게 공공사업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화요일에 공개되었다.
- 이렇게 공개된 두 사건으로 인해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에서 탄핵 표결은 가결에 필요한 2/3를 훌쩍 넘었다.
- 쿠친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주 정상회담 참석 3주 전 대통령직을

사퇴했다.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부패 척결이 올해 미주 정상회담의 주제이다.

- 페루는 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은 페루를 “중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극심한 불평등, 고질적인 부패, 취약한 제도 등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이다. 아직도 많은 페루 국민들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방식의 간단한 해결책을 갈망한다. 독재자 대통령이었던 후지모리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는 현재 최대 야당의 당수이다.
- 예정된 탄핵 표결안은 3개월 사이 두 번째 맞는 탄핵 위기로, 이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과 쿠친스키 사이 장기간 계속되어온 투쟁을 반영한다. 크리스마스 직전 이와 비슷한 탄핵을 시도했으나 케이코 후지모리 의원의 남동생 켄지 후지모리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당에서 탈퇴함으로써 실패했다.
- 탄핵이 실패한 3일 후 쿠친스키 대통령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는 동안 암살단을 지휘하고 엄청난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죄로 25년 형을 살고 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를 사면했다.
- 이에 대한 후지모리 남매의 의견은 달랐다. 본인의 대통령 출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야당 통제권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케이코 후지모리는 아버지의 사면을 반대했다. 아버지와 비슷한 극우파로써 케이코 후지모리는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하고 2016년 7월에는 쿠친스키한테 밀렸었다.
-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좌파 세력을 포함하여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자녀가 다시 집권하는 것에 경악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의 표를 받아 중도 우파 쿠친스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의견이 일치하는 가운데, 후지모리의 사면은 쿠친스키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입혔다.
- 페루의 선거기관인 ONPE의 전 수장이자 정치학자인 페르난도 투에스타에 의하면 쿠친스키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야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전에 야당에 유화정책을 사용하는 등 말 실수와 서투른 전략으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 뇌물수수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쿠친스키가 많은 사람들이 뇌물하면 떠올리는 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고,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 계약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페루 국민은 말문이 막혔다. 쿠친스키는 처음에 오데브레시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왔다.
- 그 사이 알베르토 후지모리를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면서 쿠친스키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졌다. 쿠친스키의 최근 지지율은 15퍼센트에 그쳤다.
 - 쿠친스키의 명예 실추에 비추어 봤을 때 브라질을 제외한 국가 중 오데브레시 스캔들로 가장 타격을 입은 나라가 페루라고 할 수 있다.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후지모리와 쿠친스키 정권 사이에 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한 명은 오데브레시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미결구금되어 있으며, 또 한 명은 오데브레시로부터 2,0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로 미국에서 강제송환 위기에 처했다. 두 명 모두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 마지막 인물로 알란 가르시아는 10억 달러 계약을 발주하며 과거 그 어떤 페루 대통령보다 많은 계약을 2006년과 2011년 사이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오데브레시의 관계를 축소하려고 한다.
 - 오데브레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25억 달러 계약의 대가로 페루 공무원에게 총 2,900만 달러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 많은 페루 국민들은 현재 정국에 절망하고 있고, 시위자들은 “모두 없애 버려라!”라는 반체제 구호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페루 대표부 의장인 전 내무장관 월터 알반은 부통령 마틴 비즈카라가 이끄는 새로운 정권에 희망을 걸어 볼 만하다고 한다.
 - “쿠친스키는 실패했지만 정말 부패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의회에서 야당과 함께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페루 남부 연안에 위치한 작은 지역인 모케과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비교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비즈카라는 현재 캐나다 대사를 겸직하고 있다.

※ 원문기사 : Peruvian President Kuczynski resigns amid corruption scandal (The Washington Post, Mar. 21, 2018)

2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부패척결 운동에서 한국을 배워야 (The Washington Post, 2018.1.8)

-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그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시선이 끌리면서 그가 불과 일주일 전 미래형 신도시 ‘네옴(NEOM)’ 출범식에서 열린 투자회의에서 세계적 산업, 기술, 금융 기업에게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했다는 사실은 잊혀졌다. 데이브 에거스의 장편소설 『왕을 위한 홀로그램』에서 한 미국인 영업사원이 ‘네옴’과 비슷한 경이로운 대사업을 기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세계와 국민들을 마법을 걸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썼다.
- 수십 명의 왕족과 고위 관리가 부패혐의로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되며 마법이 깨졌다. 법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갈수록 갈취행위로 보이는 듯한 수사에서 몇 명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석방되었다. 최근 정부에 의해 일부 민간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정경관계가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얽히며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왈리드 빈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체포되자 왈리드 왕자가 소유한 킹덤홀딩스 주가는 21퍼센트 이상 폭락했다. 이런 강압적인 수단을 보는 해외투자자들은 “자국 내 저명한 사람들에게 이런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우리한테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가 주저된다고 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기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필자는 1970년대 오일 붐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확장성을 봤고 기업 지도자들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수준에 오기까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것을 목격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과 여러 적법한 지원했기 때문에 기업 지도자들은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알사우드 가문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만연한 부패는 이런 빠른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다. 지금 심각한 결점이 있는 사우디 부패척결 운동이 왕족과 유명 기업인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기업의 개혁자 세대에 대한 감사함을 간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 성장과 다양화를 주도하면서 수백만명의 사우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 정경유착은 사우디아라비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이 터지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정경유착 사례가 밝혀졌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재건을 위해 독점권과 저금리로 기업인들과 자본가들을 유인했고 그 대가로 회사 수익의 일부를 가져갔다. 이 전략으로 인해 한국에는 재벌이라고 부르는 가족 소유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탄생하게 되었고 대부분 삼성과 현대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재건했고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시켰다.
- 한국이 택한 부패에 대한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탄핵사건과 관련된 기업체들은 박근혜 정부 탄핵 사건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회사들의 일상 자금운용과 수익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금감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이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 아랍 기업인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교차점에 서있다.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전 2030이 성공하기 위해 투명성, 정의, 기회의 평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일 년간 지속된 부패와의 싸움은 특히 11월 4일 이후 불확실성과 명확성 부족을 야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이 번창하고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법규가 준수되고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의 모든 기업인이 정권과 손을 잡고 부를 창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는 예외나 특혜 없이 모든 기업인에게 체납된 세금 등을 포함한 일괄 처리를 제안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부패척결을 위해 급하게 설립된 ‘최고위원회’ 대신, 이러한 반부패

운동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가문, 특권, 인맥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우디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과거 관행에서의 급진적이고 극적인 선회가 될 것이다.

-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다른 왕자들에게 빼앗고 싶은 것을 하게 놔두어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어차피 없다. 왕자들은 국가에 재정적, 윤리적 부담이 될 뿐이다. 하지만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는 정당한 기업들이 창출한 부와 왕족에 만연한 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년간 왕족이 기업부문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일반 국민과 국가 경제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왕족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수백만 평방미터 규모의 땅을 받았고, 이는 빈곤층의 주거비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들은 지원 받은 보조금 가격에 밀을 판매하기 위해 밀 농장에 물을 공급받기 위한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저수지를 파괴한 것이다. 사우디 왕족은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부패한 기업인 단체를 만들었고 사우디 기업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
-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제대로 부패를 척결하고자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필수요소인 국가에 대한 신뢰와 국내 기업의 역할을 좋은 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업인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투자를 계속하지 않는다. 대신 자본과 전문성을 다른 국가에 투자할 것이다. 둘째,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는 대형 하청업체와 대행 업체를 국가의 부로 인식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엄청난 경험을 축적했으며 국내외로 명성을 알렸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제도적 기억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 왕족의 직함 및 봉급을 포기하고 더욱이 정부 직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왕족이 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부패를 정의하고 부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부패와의 싸움은 복잡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위해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의 부패척결 노력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 원문기사: What Saudi Arabia could learn from South Korea about fighting corruption
(The Washington Post, Jan. 8, 2018)

한국, 반부패 호랑이 (The FCPA Blog, 2018.2.16)

-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호랑이’로 알려진 한국을 이제 ‘반부패 호랑이’라고 불러야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획기적인 ‘김영란법’의 제정과 작년 한 해 동안 공세적인 집행 덕분에 전 지구적 반부패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 한국의 부패 문제는 2가지로 수렴되는 역사적 힘의 산물이었다.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에 따른 대가가 있었다. 하나는 유교의 사회철학으로, 이는 사회적 통합과, 선물을 통한 인위적 관계 유지를 강조한다.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종종 이러한 선물이 호의와 존경의 표시이자 동시에 우호적 처우를 위한 구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는 선물이면서 뇌물인 것이다.
- 두번째 힘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였다. 복구를 위해, 한국의 폭압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거대 가족경영 재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조합은 성공적이었다. 당연히게도, 부패가 뒤따랐다.
- 그러나 2014년 변화의 기폭제가 등장했다. 300명이 페리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조사결과 안전 규정에 대한 부적절한 이행이 원인이었다. 한국에서 매우 존경받는 김영란 전 대법원 판사는 반부패법 초안을 이미 만든 상태였다. 사고로 인한 대중의 분노에서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끌어냈고, 2015년 마침내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다.
- 김영란법이 한국 법과 사회에 미친 많은 변화 중에, 2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우선, 동 법은 매우 소액을 제외하고 공직자에게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존 반부패법을 크게 넘어서서, 한국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교사를 포함하였다. 우호적인 언론 기사 거래는 끝났다. 반짝이는 성적표는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이다.
- 기업과 관련하여, 동 법은 고용인이 저지른 뇌물에 대한 기업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미국의 사용자 책임 모델과 달리, 동 법은

단순하게 대위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가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2009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묻지 않은 채”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사용자 책임을 적법절차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다니!) 대신 김영란법은 영국의 뇌물법 모델을 따라, 기업 책임을 고용인에 대한 감독상의 부주의로 규정했다. 뇌물 방지에서 “적절한 관리”를 보여주는 것은 적극적 방어이며, 다만 그 틀은 향후 구체화 되어야 한다.

※ 원문기사: South Korea: An anti-corruption tiger (The FCPA Blog, Feb. 16, 2018)

3 국제회의 동향

1 '18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2.27.(화) ~ 3.1.(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아르헨티나, 프랑스)
- 참석 :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IMF, FATF 등 국제기구 대표 및 CAF, CARICOM, Africa Union 등 지역 기구 대표

※ 우리측 :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검사, 외교부 사무관

2. 회의 주요 결과

- 회의 주요 결과
 - 공동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주도로 공기업의 청렴성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우선순위로 선정, 동 주제에 대한 각국 우수사례 및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공유
 - 실무그룹 운영방안에 대해 참가국들은 반부패 고위급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공감대 형성
 - 실무그룹은 기존 반부패 행동계획의 8개 주요 의제에 대해 각국의 이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공기업 청렴성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도출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함
- 위원회 활동 내용
 -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 소개
 - '17년 실무그룹에서 발표한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지 회람을 사무국에 재차 요청하고, 근시일 내에 질문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함

3. 관찰 및 평가

- 공동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주도한 공기업 청렴성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고위급 원칙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규제 정책, 기술 지원, 역량 강화)에서의 협력방안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7년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G20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는 '18년 우선과제(공기업 청렴도 향상)와 공통되는 주제인바, 금년도 조사 및 자료집 발간을 완료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임

② 제26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2. 24.(토) ~ 2. 26.(월), 파푸아뉴기니
- 참석자 : 21개 APEC 회원, TI, UNODC 등 국제기구 대표 60여명
 - ※ 우리측: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검사

2. 회의 주요 결과

- 제26차 ACTWG 회의
 - 각국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에서는, 9개 회원기관(대만, 한국,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태국, 베트남, 칠레, 인니, 일본)이 발표
 - ※ 우리측은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 및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 등 발표
 - 워킹그룹 운영원칙 관련, 조직과 행정 분야 개혁안 승인
 - 의장과 부의장(2인)이 참여하는 회의체 신설, 2회 연속참석률이 의결 정족수 미달일 경우 워킹그룹 폐지여부 검토
- APEC 부패예방 메커니즘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 효과적인 부패예방 메커니즘 도입·운영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모색, 관련 APEC 모범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
 - 위원회는 APEC 부패예방 메커니즘의 우수사례로 청탁금지법을 소개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적극 홍보
- 위원회 주요 활동
 - 한국의 부패예방 모범사례인 청탁금지법의 우수성 소개
 - 제19차 IACC 개최전략 파악 및 국제사회 협조 요청
 - 16차 IACC 개최국인 말레이시아로부터 행사 유치절차 및 TI와의 협상 전략 등과 관련한 경험 공유 및 의견 청취
 - IACC 아젠다 위원회 회원에게 한국의 행사 개최의사를 전달하고 국제사회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행사개최 지지 요청

3. 관찰 및 평가

- 민간부패 근절에 있어 시민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분위기 확인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를 통해 부패인식지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 견인
 - 향후 APEC 반부패 워크숍, 기타 지역 컨퍼런스 등의 발표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 등 소개

③ 2018년 제1차 OECD 청렴작업반회의, 청렴 포럼 및 청렴네트워크 워크숍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3. 26.(월) ~ 3. 30.(금), 프랑스 파리 OECD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 회의구성
 - 청렴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연2회)
 - 청렴포럼(Integrity Forum, 연 1회)
 -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Integrity Network Workshop, 연 1회)
- 참석자 :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인사처 윤리정책과장 및 주무관, 주OECD대표부 참사관 등 30여 개국 대표단

2. 회의 결과

-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포럼은 부패방지 관련 정책과 시스템 마련보다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논의
- 국제화에 따른 국가별 부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제도적 불투명으로 인한 부패 문제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범지구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한 투명한 사회 시스템 건설 필요성 강조
- 지방정부의 정책과 운영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에 더욱 취약함을 지적하며, 선출직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 또는 토착 세력과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은 정책 운영의 중요성 강조
- 또한 공공 인프라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업무 종사자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정부의 인프라 분야 반부패 정책 비전 설립, △인프라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의 청렴 교육 시행, △기업 내 감사 담당자들의 청렴 훈련 강화 등 제시
- 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해서 조세 기관과 반부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자금추적 등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세 회피, 자산 은닉, 자금 세탁 등을

통한 부패 행위 적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함

- 스포츠 분야 부패방지 이슈가 여러 세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정치나 조세 관련 이슈보다 부패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스포츠 부패 방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제시
- 정부의 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기업의 반부패 의지와 집단 행동이 필요하며, 대중에 대한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 저널리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함
- 청렴네트워크는 ① 공공부문 내 윤리, ② 공직 투명성 촉진을 위한 디지털 수단과 공공 데이터, ③ 부패척결에 대한 국제적 경험, ④ 부패 방지 교육 등 4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2-3년 주기로 실무 그룹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

3. 위원회 활동

- OECD 청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공공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 이행을 위한 톨킷 개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권고문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언급
-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17년도 회원 기관 설문조사 요약 보고서에 대하여 향후 전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인지 문의하며, 발간 시 도표 등에 비율(%) 표시 외에도 개별 국가를 표기해 주는 것이 향후 자료집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의견 제시
- 또한 사무국에서 제시한 2018년도 계획(3가지)을 한 해 활동 목표로 삼기에는 많은 것으로 평가, △ 1가지 주제를 정해 효율성 있게 이행하는 방안 혹은 △ 2년 단위의 계획을 작성하여 주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행하는 방안 등 제시
-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의 패널 토론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신고 제도 및 신고 절차 및 접수 경로, 신고 내용별 분류 방법,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소개

4. 관찰 및 평가

- 청렴작업반회의(SPIO)와 청렴 포럼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청렴구현이 국제적 반부패 원칙과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경쟁적으로 새로운 원칙을 개발해온 과거 트렌드와는 달리 중복적인 정책 개발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부패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노력에 따른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부진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앞으로 부패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OECD 사무국은 작년에 이어 금년 포럼에서도 부패에 대한 행동학적 분석론을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였으며, 최근 발간한 상황별·성향별로 부패를 일으키는 요소와 심리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관찰됨
- 세션 발제 중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이 부패 극복과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예시로서 몇 차례 언급된바, 반부패·청렴 관계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청렴 포럼 계기에 참석한 학술기관, 시민사회 단체 중 EU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ERCAS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가별 공공청렴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IPI(Index of Public Integrity)를 개발, 국가별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함
- 사법 독립성, 행정 시스템, 무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e-citizen, 언론 자유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함
 - ※ 한국은 2017년 기준 109개 국가 중 23위를 차지
- ERCAS는 IPI가 세계은행, IMF, UN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공공청렴성을 측정하는 데 차별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IPI를 ‘인식’을 측정하는 CPI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시킬 의향을 강력하게 표명한바, 향후 동 지표의 활용 및 인지도 등 발전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됨

4 옴부즈만 소식

□ IOI: 신입 유럽 지역 이사 선출

※ 출처: IOI 'European Region elects new Director' (IOI 홈페이지>News, 1.3.2018)

- 루시아 프란치니는 투스카니(이탈리아)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결과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유럽 지역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다. 유럽지역 내규에 따라 공석은 유럽지역 이사 중 한명이 자동으로 채우게 되었다. 그리고 울레 마디세 에스토니아 법무관이 IOI 세계 이사회의 공석을 맡게 되었다.
- 따라서 유럽 지역이사회에 공석이 생겨 유럽지역 내규 제 8(d)조에 따라 2017년 12월 지역회장 사무국과 카탈루냐 옴부즈만 라파엘 리보는 전자투표를 통해 후임을 선출했다.
- 세 명의 후보가 있었으며 이 중 한명은 전자투표 도중 후보직을 사퇴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한 총 47명의 회원이 마감일까지 투표한 결과 그리스 옴부즈만 안드레아스 포타키스가 유럽이사회 새로운 이사로 선출되었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은 IOI 세계 이사회에 선출된 울레 마디세 이사를 환영하고, 유럽 이사회에 선출된 안드레아스 포타키스 이사에게 축하의 말씀을 보내며 앞으로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울레 마디세



안드레아스 포타키스

□ 포르투갈: 신임 포르투갈 옴부즈만 취임

※ 출처: PORTUGAL 'New Portuguese Ombudsman took office' (IOI 홈페이지>News, 1.3.2018)

- 마리아 루시아 아마랄은 1957년 7월 10일 앙골라에서 태어났다. 아마랄은 노바 데 리스보아 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며 2007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재임했다.



- 그녀는 공법, 특히 헌법을 연구하고 교육 분야에 종사했다. 이 분야의 논문을 다수 집필했으며 여러 국제전문가협회 회원이다.
- 마리아 루시아 아마랄은 2017년 10월 20일 의회에 의해 포르투갈 옴부즈만으로 선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2일 취임했다.

□ 캐나다: 토론토 공공임대주택 우선 이전 절차는 세입자에게 헛된 희망만 준다

※ 출처: CANADA ‘City Ombudsman says Toronto community housing priority transfer process giving tenants false hope’ (IOI 홈페이지>News, 2.7.2018)

- 토론토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거주처에서 건강 혹은 안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다른 세대로 이전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은 토론토 공공임대주택공사(TCHC)로부터 근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옴부즈만 수산 오퍼러는 오늘 『토론토 공공임대주택공사의 의료 및 안전 위험 우선 이전절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오퍼러는 “의료 및 안전 위험 우선순위 목록은 세입자에게 헛된 희망을 준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의 55% 정도가 이미 대기자 명단에 5년 이상 올라있었다.”라고 말했다. 토론토 옴부즈만 조사 결과, 소위 “Overhoused”라고 불리는 필요 이상으로 집이 지나치게 넓은 세입자들이 우선순위를 받는 것이 이런 지연현상의 이유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TCHC가 공공임대주택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에 따르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지에 사는 세입자들은 수용의 한계가 온 침체된 대기자 명단에 올랐고, Overhoused 대기자 명단이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다. 대기자 명단에 있는 세입자들은 곧 더 나은 세대로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 일관성 없는 절차와 직원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런 부당함이 더욱 심화된다고 오퍼러는 이야기 한다. “이전을 원하는 가정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직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 의료 및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이전해야 하는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도 없다. 직원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근거도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기자 명단에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우선순위도 없다.”
-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옴부즈만 수산 오퍼러는 21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TCHC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있다.

- ▶ 가장 시급한 의료 및 안전 위험에 처한 가정을 위해 “Overhoused” 분류보다 높은 등급의 “위기” 이전 분류를 만든다.
 - ▶ “위기” 분류의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만든다.
 - ▶ “위기” 분류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 시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하고 이행한다.
 - ▶ 새로운 정책과 절차, 새로운 “위기” 분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확실하고 열람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TCHC는 옴부즈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했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위기” 우선 이전 절차를 수립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했다. 토론토시 또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행과정에 있어 TCHC를 지원하기로 했다.
- 토론토 옴부즈만은 보고서의 권고사항 관련 TCHC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 호주: 2014년 의회 직원에 배정된 예산의 오남용

※ 출처: AUSTRALIA ‘Misuse of Parliamentary staff budget entitlements in 2014’
(IOI 홈페이지>News, 3.21.2018)

- 빅토리아 의회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ALP) 의원 21명(현직 의원 11명, 전직 의원 10명)이 선거사무원에게 당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 지급을 승인해서 의원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옴부즈만 데보라 글라스가 발견했다.
- 글라스는 2015년 11월 입법부가 조사 의뢰한 사건에 해당 보고서를 첨부했다. 입법부는 옴부즈만에게 2014년 주의회 선거 전에 ALP 의원들이 의회 직원에게 배정된 예산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라스에 따르면 “2014년 빅토리아 주 선거를 앞두고 ALP는 체계적으로 풀타임 행사 진행요원을 채용하고 배치하려는 노력을 했고, 이 중 21명은 파트타임 선거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의회기금에서 약 38만8천 달러가 지출됐다.”
- “선거운동이나 행사 진행요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선거 사무원들은 일부 의원을 위해 일을 했지만, 행사 진행요원을 선거 사무원으로 고용하기로 한 이 계획은 의회 자금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재정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책략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 글라스에 따르면 “이 계획에 동참하고 근무시간 기록표에 서명한 의원들은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믿었고, 인가 받은 자금조달 계획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선거운동에 의회자금이 사용된 것에서 얻은 혜택이 거의 없지만 다른 이들의 선출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제57대 의회 의원 21명이 의원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 “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은 존 렌더스 상원 야당 전 당수였다. 어차피 은퇴 할 거였기 때문에 렌더스 또한 이 계획에서 얻은 이익은 없었으나 의원지침 위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의회자금 사용에 있어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의원지침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대해 분명히 모호한 점이 있다. 그러나 APL의 가용한 자원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렌더스는 정도를 넘었다.”

- 글라스에 의하면 상원에서 하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할 권리가 없었다는 의회의 배타적인 인식에 대한 주장이 조사를 제약하는 요소였다고 했다. “제 수사의 범위가 의회로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재판소에서 이 견해를 판단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과 공금이 법적 절차에 할애되었던 상태였고, 의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증거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반면 의회가 알고 있는 증거와 차이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 글라스는 ALP에서 오남용된 공금을 되돌려 놓으면 “대중의 신뢰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일 글라스는 “보고서 초안의 결론을 검토한 결과 환원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고 기뻐다”라고 이야기했다. 글라스는 2014년 이런 사건 이후 시행되거나 제안된 입법 개혁에 찬사를 보내지만, 의회 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규칙과 지시를 제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 글라스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공금 오남용 혐의에 의해 더욱 낮아질 위험에 처해있다”라고 했다. 글라스에 의하면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런 사안을 다룰 권한이 주어진다면 의회에 대한 평판이 극도로 좋아질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두려움과 편애를 모두 배제하고 혐의를 조사할 수 있고 위증에 가차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환자 보호 실패

※ 출처: UK 'NHS failing patient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IOI 홈페이지>News, 3.21.2018)

- 금일 발표된 의회 및 의료행정 옴부즈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건강보험에서 정신건강 환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 또한 옴부즈만은 국민건강보험 정신건강관리 담당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능력, 발전 훈련 기회가 부족하며, 실수에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꾸준하지 않다고 한다.
- 옴부즈만에서 접수한 정신건강 민원 200건 이상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환자의 안전 및 존엄성 저해 5가지 요소가 강조됐다.
 - ① 환자 진단 및 치료 실패. 조사에 따르면 한 여성은 정신병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 받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증상이 무시되어 결국 이 여성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 ② 환자의 부적절한 퇴원 및 후속조치. 다른 사례로 복잡한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었던 한 청년을 지방보건의료서비스에서 통원치료 계획 없이 퇴원시켰고 이 청년은 자살했다.
 - ③ 취약한 위험평가 및 안전실무. 조울증을 앓고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청소년이 요양시설에서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본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위험평가를 통해 폭행사건이 쉽게 방지될 수 있었지만 위험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④ 환자의 존엄성 및 인권 침해. 다른 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병증세를 앓고 있는 한 여성에게 생리기간 중 여성용품이 제공되지 않아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야만 했다고 한다. 이 여성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여성의 존엄성이나 복지가 존중되지 않은 것이다.
 - ⑤ 환자, 환자 가족, 간병인과 소통 부족. 본 보고서에 의하면 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은 신생아와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격리조치를 당해 극심한 고통 받았다고 한다.

- 의회 및 의료행정 옴부즈만 롭 베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본 보고서를 통해 부실한 정신건강 관리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주는 참혹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존엄성 보호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이런 상황은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더 악화된다.”
- 보고서 결과는 정신 건강 5년 전망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 위원회’의 2017년 보고서의 결론을 보강했다.
- 옴부즈만은 “우리가 찾은 이런 사례들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받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멘텀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만은 앞으로 케이스워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정신건강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향후 보고서에서 이런 종류의 민원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정신질환 다시 생각하기’ 단체의 브라이언 도우 대외담당 이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 “옴부즈만의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반영한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초과된 보건서비스가 환자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개혁의 절실한 필요성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의료시스템의 여파를 강조한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위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만, 강한 추진력과 필요한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계속 접하게 될 것이다.”

□ 캐나다: 지방 및 대학 옴부즈만, 캠퍼스로 관할권 확대

※ 출처: CANADA ‘Provincial and University Ombuds promote accountability on campus’
(IOI 홈페이지>News, 3.21.2018)

- 2016년 온타리오 주 대학교들은 지방 옴부즈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는 현재까지 500개 이상 대학교 관련 민원 접수를 받아오고 있다.
- 폴 두베는 “설득 게임”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폴 두베는 지방의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교 등 무엇에 관한 민원이 되었던 자신의 작업방식은 동일하다고 한다. “옴부즈만으로서의 접근법은 항상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권고사항을 따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온타리오 입법부의 독립적인 공무원으로서 지방 옴부즈만은 해당 사무소가 관할권을 갖는 정부 조직이나 제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6년 1월 1일에 온타리오 주 21개 공립 대학교에 대한 민원 조사 권한을 포함한 옴부즈만 사무소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 4월에 폴 두베가 온타리오 옴부즈만이 됐다. 2년이 지난 지금, 이해 당사자들은 대학교에 대한 추가 관리감독 조치를 회고하며 칭찬하고 있다. 두베는 아직 옴부즈만 사무소에서 대학교 관련 민원 조사를 확대하는 중이지만 이제까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다.
- 두베에 의하면 “앞으로는 옴부즈만이 보다 폭 넓은 공공부문에서 활동했듯이, 대학사회에서 옴부즈만이 구축한 견고한 관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00년부터 라이어슨 대학교 옴부즈만을 맡아온 노라 페럴은 “지방 옴부즈만의 관할권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한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 맥마스터 대학교 옴부즈 캐롤린 브렌던도 이에 동의하며 “매우 긍정

적인 발전”이라고 말했다.

- 매년 350건에서 400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는 브렌던은 “대학교 내의 옴부즈만은 개개인의 상황이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단계이고 추가적인 기회”라고 이야기한다.

민원 수 분석

- 두베의 옴부즈만 사무소는 2년 동안 약 422건의 민원을 받았으며 올해 2월 초 총 민원이 500건을 초과했다.
- 온타리오 대학생 연합(OUSA)의 연구·정책 분석가인 콜린 에이치슨은 “이 수치는 온타리오 대학 분야에서 지방 옴부즈만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 두베에 따르면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의 약 85%가 학생에 의해 신청되고 10% 정도는 교직원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5%는 주차문제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의해 신청된다.
- 2016년 개소 이후 첫 3개월 동안 92건이 들어오고 2017년 3월 31일 종료된 첫 회계 연도 한 해 동안 267건이 접수되면서 민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민원의 온상”은 아니라고 두베는 이야기한다.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일부 정부 부처와 비교해 봤을 때 민원 수가 “비교적 낮다”라고 한다. 예컨대 작년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가 대학교까지 관할권이 확장되었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은 2,667건이 접수됐다.
-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의 2016~2017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학점 정정 분야가 대학 관련 민원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175건 중 27건을 차지했다. 두베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시험에서 받은 낙제 점수에 대한 정정신청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 두베는 이 사건을 검토했고 대학교에서 정책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학생은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허가 받았다.
- 두 번째로 잦은 민원은 학비, 수수료, 학자금 지원 등과 관련되어 당해 연도 2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동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은 토론토 대학교(28건), 맥마스터 대학교(15건), 요크 대학교(12건)이었다.

대학교 옴부즈만

- 두베는 아직까지 대학 관련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한다. 대신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는 대학교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특정 대학교 사무소 혹은 정정신청 절차에 조회를 의뢰하는 등 “가능한 한 낮은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민원이 대학교의 정정신청 혹은 분쟁조정 절차를 이미 거쳤고 이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 옴부즈만은 대학교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개선방안을 권고한다. 그러나 지방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라이어슨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패럴 박사에 따르면 대학 옴부즈만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사건을 다룰 때 민원 신고자와 대화를 통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조언해준다.
-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가 관리 감독하는 대학교 중 11 곳에 옴부즈가 있다. (사무소 명칭은 시스템마다 옴부즈, 옴부즈만, 옴부즈퍼슨 등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와 대학교 옴부즈퍼슨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놓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지 않는다고 두베는 말했다. “대학교 옴부즈만이 해결하고 있는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개입하기에 시기상조이다.”
- 지방 옴부즈만 사무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접수된 민원에 관련된 대학교에 자체적 옴부즈퍼슨이 있는지 먼저 파악한다. 자체적인 옴부즈만이 있고 해당 옴부즈만에게 그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방 옴부즈만은 우선적으로 대학 옴부즈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추천한다.
- 두베는 “내부 문제는 내부적으로 가장 잘 해결된다.”라고 하며, 대학교 옴부즈퍼슨은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

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고자에게 설명해서 ‘대학교 옴부즈만을 통해 절차를 밟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

- 패럴 박사는 대학교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 두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균형을 이룬다고 말했다. 대학교의 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옴부즈만이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지방 옴부즈만은 직원과 자원이 더 많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경험이 있다. 나아가 맥마스터 대학교에 근무하는 브렌던은 지방 옴부즈만은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 OUSA는 지방 옴부즈만과 대학교 옴부즈만 사무소 사이 공식적인 연관성을 원한다. 에이치슨에 따르면 일부 사무소는 대학교, 일부는 학생회나 학생 부담금, 일부는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이 받는 자금 지원 규모가 다르며, 이에 따라 OUSA는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원한다.
- 두베는 더 많은 대학교에 옴부즈만 사무소가 생겼으면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확고하며 일관된 이의 제기 절차’를 가지는 것이다.

지방 옴부즈만 비교

-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 지방 옴부즈만 두 곳에서도 대학교를 관리·감독한다.
-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시민대표(옴부즈퍼슨과 동일)는 해당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메모리얼 대학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2013년 이래 동 사무소는 자체적인 옴부즈퍼슨이 없는 메모리얼 대학교에 대한 민원 13건을 접수 받았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지방의 브래들리 모스 부대표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의해 접수되었다고 한다. 동 사무소에서 2015년과 2016년

에는 각각 두 건, 2017년도에는 한 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모스에 따르면 동 사무소는 지난 몇 년간 대학 관련 민원을 다루지 않았지만 옴부즈만 서비스를 대학사회에 홍보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접수 받는 민원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옴부즈퍼슨 제이 찰크는 2016-2017 회계 연도 동안 대학 관련 민원 29건을 받았다. 동 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된 이 통계자료에는 총 11개의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동 기간 동안 9개의 대학교에서 민원이 접수가 됐다.
- 찰크는 지방 간 이런 민원 건수의 차이는 학생 수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옴부즈만 사무소의 관할권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된 분야의 경우 사람들이 옴부즈만 사무소의 역할을 이해할 때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5

참고 자료

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아시아부패지수

※ 출처 : Asian Intelligence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Asia, the US and Australia" 한국 부분

지역 개요**2018 아시아 내 부패 현황**

- 최근의 우리 조사를 보건대, 사람들은 점점 더 부패에 비판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 같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내부고발자와 사기꾼 모두에게 편해지고 있다. “가짜 뉴스”가 적법한 수사 보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거짓말과 명예훼손을 확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인식과 투표 성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보와 거짓정보를 확산하는 개인정보 조작에서 성장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분명히 비윤리적이고 부패를 조장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로지 공정한 홍보 수단일 뿐이다. 법원이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지만,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될까? 많은 나라에서는 법원이 부패 행위를 규정짓는 곳이 되기보다 문제의 핵심 일부가 되고 있다.
- 우리의 최근 설문은 1,802명의 답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97명이 답변한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조사대상 국가별로 최소 100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국가로 처리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패 인식은, 캄보디아가 가장 크게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낳았다.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조사한 국가들 중 14개국에서 부패인식이 악화되었고, 2개 국가만이 개선되었다. 우리는 올해 조사를 1월부터 3월초까지 실시했다. 답변의 반 이상이 작년 설문조사에 답변했던 사람들의 이메일을 통해 들어왔다. 나머지는 면대면 인터뷰나,

기업 컨퍼런스에서 기회가 있을 때 CEO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여러 기업 협회의장에게 회원사들에게 조사를 전달해주도록 요청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회사 운영진이거나 전문가다. 일부는 조사 대상 국가 국민이고, 일부는 조사 대상 국가 내 기업 또는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었다.

- 최근 조사로부터 얻은 바를 말하기 전에, 동 조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 조사는 실제 부패 수준이 아니라 인식을 측정한다.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인식은 실제 부패 수준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수 있다. 최악의 부패가 인지 못한 채 넘어가며,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갖기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인식은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정치적 라이벌이 상대의 신용을 떨어트리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주장함으로써 부패 수준을 과장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인식은 실제 부패수준의 범위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
- 그럼에도 인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업을 할지, 어떻게 계약을 구성할지, 누구와 파트너를 하고 전략적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기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인식은 직원들이 특정 직장을 수용하려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방해하는 개인적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 인식은 또한 투표자들이 정치 후보자의 청렴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우리 조사 점수가 실제 부패 수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한해에서 다음 해에 동 이슈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지, 덜 비판적이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유용하다.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 부패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우리 조사는 개별국가의 실제 부패 측정에 취약하며, 국가 간 실제 부패 수준을 비교하는 데도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답변자들에게 자신이 살거나 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점수와 코멘트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응답자들이 공통의 기준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 조사는 어떻게 한 국가 내 기업 CEO가 다른 국가 CEO와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편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점이 동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다.

- 우리 조사는 특정 유형의 부패를 측정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측정은 유의미한 국가별 비교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셈이다. 우리는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부패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답변자들이 어떤 측면의 문제가 가장 괴롭히는지를 판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사 코멘트 섹션에서 이들 구체적인 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했다. 여기에서, 답변자들은 자신이 왜 그런 점수를 주었는지, 부패가 개선되었는지, 동일한지, 악화되었는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알려준다.
- 부패는 너무도 많은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고 단순한 정의에 어긋난다. 하나의 국가에서도, 정부에 대해 부패혐의가 있는 자들이 투옥되고 무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흔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정부의 바로 그 행위를 부패라고 딱지를 붙인다. 마르코스가 쫓겨난 다음 필리핀이나, 수하르토가 내쳐진 다음의 인도네시아를 보라.
- 게다가 정부의 위협 전략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조사로는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 마하티르가 수상일 때 점수는 양호했다. 그는 자신의 정부 시절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법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이런 비난을 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마하티르가 은퇴하고, 그의 후계자인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는 사람들이 보다 공개적으로 부패를 토론하도록 허용하자, 우리 조사상의 점수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이것이, 응답자들이 갑자기 전에 있는 부패를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인지(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또는 사람들이 덜 위협을 받게 되어 더 비판적이 되었기 때문인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바다위가 집권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부패 수준이 갑자기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 규모가 얼마든 간에, 이는 안정적이었다. 바뀐 것은 인식이거나, 이런 인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 엄격한 법률 용어로 부패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최악의 부패 유형이 수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 법원이 유죄라고 할 때만이 부패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동판결이 나기 전 벌어진 수년간의 비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법원 스스로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그렇게 보여 진다. 판사들은 돈에 팔린다. 판결도 마찬가지다. 일부 경우 법원은 밀린 사건이 많고 조사기관은 자원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부패가 오랫동안 조사되지 않아서 뇌물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에서, 법원은 정치적 간섭에 극히 취약하며, 부패가 극히 정치화되어, 정치 지도자들이 법원에서 기소할 것과 그냥 놔둘 것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로비 그룹이 법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실제 부패한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제도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 벌금을 지불하거나, 부패 희생자들이 비공개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 같은 수단이다. 이런 모든 경우에서, 법원은 실제 부패가 발생한 때를 정의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 법원을 조작하는 것은 일부 정부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는 수단 중 하나다. 어떤 경우에는, 캄보디아와 중국처럼, 정치 지도자가 작년에 권력을 집중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비판이나 독립 수사의 범위를 좁혔다. 다른 경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사법부, FBI 기타 기구를 편파적이고, 허위뉴스를 퍼트리며 부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이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가 있다. 정치적 간섭 역시 이들 기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른 최근 상황은 정반대인데, 과거 놓쳤던 오랫동안의 부패 관행을

알아내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우리 조사의 대다수 응답자들은 부패를, 정치와 로비와 연관 짓고 있으며, 이 사안은 우리가 조사한 매년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응답자 136명 중 한 사람(남성)이 미투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무실 내 부패 문제가 특히 우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보이지만,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 같은 사건은 수십 년간 이어져오고 업계에서는 많은 이들이 의심해왔던 분명한 부패 사례이기도 하다. 이제 그 문제가 법원이 아닌 언론과 유명인들 - 일반인들에게는 와인스틴과 변호팀보다 훨씬 신뢰를 받는-에 의해 “폭로”되면서, 이 운동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퍼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의 부패가 향후 인식 조사에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짐작한다.

- 수년간 있었지만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는 부패의 다른 사례로는, 일본에서 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제품 하자 은닉과 실험결과 조작 사건들이다. 일부 사례에서, 고객 기업들이 국민들을 놀라게 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런 결함을 대중들로부터 숨기는 데 공모하였다. 이는 인식을 성공적으로 왜곡시켜온 부패의 사례다. 매년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나, 올해 전까지는 우리 조사에서 누구도 제품결함의 은닉을 주요 문제라거나 부패 사례라고 언급한 이가 없었다. 올해는, 응답자 1/4이 코멘트에서 이런 유형의 기업 비위를 언급하였고, 우리 조사에서 일본은 점수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 이 같은 기업 비리가 지금에 등장하게 된 이유로는 최소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조사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법원이 결함을 공개하면서, 일본 기업에게 은닉 행위를 밝히도록 강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일본 내 내부고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비위를 밝히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 모두 부패에 대한 인식이 향후에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게 되는 이유다.

- 인식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조만간에 이러 저런 선거-인도네시아와 대만은 지방선거, 미국은 중간선거,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일본까지 총선-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지금이 부패가 역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때다. 왜냐하면 후보들-특히 재선을 바라는 지방 공직자-은 캠페인을 치를 돈이 필요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부패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집권을 했건 집권하려고 하건 간에 후보들이 상대방의 신뢰를 떨어트리기 위해 흠탕물공격에 의지한다. 이런 비방의 일부는 사실이나, 많은 경우 거짓인데, 시민들은 부패 문제를 조명하거나 과장하게 되는 음모적인 뉴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된다.
- 위의 경우들은,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향후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인데, 다른 현상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부패이고 아닌지를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어떤 나라가 합법이라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별 공식적 입장이 서로 대각선으로 반대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한 나라에서는 부패하고 불법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은 미국과 기타 OECD 국가들이 수십년간 해온 국제적 행위 기준을 정하는 능력이다. 중국 등 새로 등장하는 권력은 거버넌스의 국제 기준에 대해 자기 할 말을 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등 서방 정부가 용인할 수 없거나 부패하다고 하는 어떤 관행을 의무화하기를 원할 수 있다.
- 외부 컨설팅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얻어서 대중의 인식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발표로 페이스북 주가가격이 곤두박질 친 것을 보라. 어느 누구도 페이스북이 부패하다고 비난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사람들이 착취할 수 있게 결함을 용인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는 희생자들에게는 부패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그룹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신용제도”를 개발하여 항공사, 은행, 보안서비스 같은 관련 기구들이 제한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한다. 미국에서처럼,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거대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정하는 것은 당과 정부가 될 것이며, 만일 사용자들이 자기 정보를 숨기려 하거나 당이 숨기고 싶은 정보를 전파하려고 한다면, 그 사용자는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중국에서 합법적인 것은 미국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이는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서로 매우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십여 년간 부패 인식의 변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ustralia	1.40	1.47	1.39	1.28	2.35	2.55	2.61	2.67	2.47	2.50
Cambodia	8.10	8.30	9.27	6.83	7.84	8.00	7.75	7.75	7.80	8.13
China	7.30	6.70	7.93	7.00	7.79	7.10	6.98	7.50	6.55	7.08
Hong Kong	1.74	1.75	1.10	2.64	3.77	2.95	3.17	3.40	3.67	4.38
India	6.50	8.23	8.67	8.75	8.95	9.15	8.01	8.13	6.86	7.25
Indonesia	7.69	9.07	9.25	8.50	8.83	8.85	8.09	8.00	7.63	7.57
Japan	2.63	2.63	1.90	1.90	2.35	2.08	1.55	3.00	2.92	3.55
Macau	3.75	5.71	4.68	2.85	4.23	3.65	4.58	6.15	6.34	6.50
Malaysia	7.00	6.05	5.70	5.59	5.38	5.25	4.96	6.95	6.64	6.78
Philippines	7.68	8.25	8.90	9.35	8.28	7.85	7.43	7.05	7.00	6.85
Singapore	0.92	0.99	0.37	0.67	0.74	1.60	1.33	1.67	1.60	1.90
South Korea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6.38	6.63
Taiwan	5.85	5.62	5.65	5.45	5.36	5.31	5.00	6.08	5.34	5.75
Thailand	6.76	7.33	7.55	6.57	6.83	8.25	6.88	7.67	6.75	7.13
USA	2.71	1.89	1.39	2.59	3.82	3.50	4.59	4.61	5.15	5.54
Vietnam	7.40	7.13	8.30	7.75	8.13	8.73	8.24	7.92	7.16	7.90

※ 점수는 0~10점으로, 0점이 최고점, 10점이 최악의 점수임

※ 조사 질문은: “당신이 일하고 있는 국가의 부패 문제에 어떻게 점수를 주겠습니까?”이며, 이 질문은 2015년 이래 정확히 동일하나 그 전의 조사 질문과는 약간 다른데, 이때는 “부패가 전체적인 사업환경에 어느 정도 방해하는가?”였음

한국

- 연이어, 대통령이 직위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열심히 부패와 싸웠는지를 자랑하고 나서 뇌물로 의심받고 있다면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현대사에서 부패 스캔들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대통령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문대통령이 그 정형을 꺾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이다.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는 부패로 탄핵되었으며, 현재 뇌물과 권한남용 죄목으로 재판 중이다. 선고는 다음 달 예정이다. 박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재임 중 친인척과 보좌관이 연루된 무수한 부패 혐의로 검찰에 조사 중이다. 이명박은 임기 중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명박의 전임자인 노무현은 한국의 최초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진실된 반부패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했으나, 가족이 연루된 뇌물혐의로 퇴색되었고 2009년 조사 중 자살했다.
- 계속해서 시간을 되돌려 더 많은 사례를 지목할 수 있지만 제한된 공간상 여기까지 하겠다.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사건으로 한국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동전의 양면으로 한국 기업 지도자들은 정치적 특혜를 대가로 이런 부패를 지탱해 왔다고 말하면 충분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들의 부패가 발견되어 체포되고 기소되었으나, 대부분이 사면되고 삼성의 대표인 이재용 등 누구도 선고 받은 만큼의 형을 다 살지 않았다. 이재용은 지난달 1년 반의 형을 살고 고등법원에서 사면되었다. 그의 사면이, 삼성이 주요 스폰서였던 평창동계올림픽게임 개막 직전에 이루어진 점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이재용의 사면은 기존의 사면보다 훨씬 더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존 사면은 대통령에 의한 것이나, 이재용의 사면은 법원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한국 지배계급에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한다.
- 우리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진 부정적 인식은 정부와

기업 최고위층에서 지속되고 있는 뇌물행위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멘트를 보면, 응답자들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존재해온 부패를 해소하는 데는 개선이 있다고 한다. 권익위 같은 공적 기구는 최고위층 부패를 단속할 권한이 없을 수 있으나, 한국의 선물 문화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중하위 계층에서의 불법청탁관행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행해 왔으며,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보조금 등 공적자금 누수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 권익위가 싸우고 있는 부패 유형은 실제 일반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반부패기구가 해결하기에는 능력 밖에 있는 상층 뇌물의 그림자로 인해, 다른 전투에서 이루어진 효과들이 가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위층 부패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사람들은 현행 정부가, 너무도 고위층이라 법적 처벌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간 등 굽어주기 관행을 멈출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긍정적인 답변 예시

1. 부패가 훨씬 더 노출되고 있지만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2. 지난해 말 발표되어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 약 4백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의 시작 이래, 이러한 사회계층의 부패는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적절한 행동이 무엇이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더 인지하게 되었으나, 정부와 기업 고위층에서 벌어지는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재벌 회장은 과거보다 감옥에 더 오래 수감되어 있다. SK 회장은 거의 2년 가까이 있었다. 삼성 이재용은 1년 반 있었으나 이는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면 더 길었을 것이고, 이재용 사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한 것이다.

부정적인 답변 예시

1. 고율의 상속세로 인해, 가족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패한) 기업구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2. 한국은 계속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반부패가 이용되고 있다. 너무 많은 '인민재판'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법적으로는 너무 취약하지만 대중의 의견에 휩쓸렸다.
3. 부패와 정실주의는 깊이 뿌리내려 있다. 반부패 노력은 최고위층에서는 걸치레도 없다.
4. 특혜를 대가로 한 불법 뇌물과 동등한 선상에 있는 문제는 족벌주의와 정실주의다. 이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방식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주요 은행 고위층의 채용비리 조사에서도 명백하다. 이런 유형의 부정은 한국기업에서는 만연하다. 지배층은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2. 2017 부패인식지수

※ 출처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 올해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부패한 국가들의 언론인들과 운동가들이 매일 같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부패 척결 진척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인지하는 공공 부문의 부패 수준에 따라 180개의 국가와 지역의 순위를 결정하는 부패인식지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0점이 매우 부패한 것, 100점이 매우 청렴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국가의 3분의 2가 50점 미만을 받았으며 평균 점수는 43점이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이런 저조한 성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올해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각각 89점, 88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시리아, 남수단, 소말리아는 각각 14점, 12점, 9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가장 성적이 좋았던 지역은 서유럽으로 평균 점수가 66점이었다.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던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평균 점수 32점)와 동유럽 및 중앙 아시아(평균 점수 34점)이다.

지역 분석

①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더디고 미비한 진전

- 올해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공 부문 부패지수는 계속해서 국가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캄보디아, 북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절반 이상이 부패 인식 지수에서 50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사실상이 지역의 평균 점수는 44점이다. 100점이 매우 청렴하고, 0점이 뿌리깊고 조직적인 부패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0점부터 100점

까지 점수를 부여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부패문제에 실패하고 있다.

미미한 개선

- 작년에 스캔들에 휩싸였던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그 어떤 아시아 태평양 국가도 100점 만점을 받지 못했으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반적으로 미미한 진척이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소수의 국가만 개선의 조짐이 보였으며 대부분은 미비하고 점진적인 변화만 있었다.
- 예를 들어 지수 상 아프가니스탄의 점수는 매우 낮지만 2012년에는 8점, 2015년과 2017년에는 15점으로 상승하여 지난 6년 동안 점수가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국가 조달 분야 규제 개선 등 주요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초기 대응 덕분일 수 있다.
- 인도네시아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지난 5년 동안 32점에서 37점으로 지수가 올라 전반적으로 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기관이 부정부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간의 개선이 된 것이다.

정체된 국가

- 한국 등 다른 국가는 지난 6년 동안 상당히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했다. 최근 한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부패 스캔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대통령은 신속하게 탄핵되어 기소됐다.

하락 추세

- 안타깝게도 2017년 지수 결과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부패가 심각하다. 종종 사람들이 현 상황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 지역 일부 국가의 언론인, 운동가, 야당 지도자, 법 집행기관 및 감시기관의 직원조차 협박을 받고 최악의 경우에는 살해까지 당했다.

- 필리핀, 인도, 몰디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 내 최악의 범법 국가에 포함된다. 이 국가들의 부패 지수는 높고 언론의 자유는 더욱더 제한적이며 언론인 사망건수도 상당히 높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보고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부패 소재를 다루던 15명의 언론인들이 살해당했다. 작년에만 해도 몰디브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야민 라쉬드는 언론인 아메드 릴완 실종 사건 진실 규명 노력 중 살해당했다.
- 지역의 많은 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동시에 시민단체를 위한 공간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중국 등 국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NGO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여 시민사회를 탄압했다. 캄보디아의 부패인식지수는 지역 내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행동 지침

- 올해 조사 결과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비록 더디고 미비하지만 진척이 있었다. 많은 국가가 부패근절 노력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한다. 지역 전역에 부패는 지속적으로 만연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독자적인 행동에 기반한 것이 아닌 변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와 종합적인 계획이 채택되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이 책임감을 요구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정치적 시스템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재원을 충분히 보유한 반부패 기관이 태평양 지역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 부패 범죄에 대한 면책을 줄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상세한

기준에 따라 대응하고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법 제도가 필수적이다.

- 시민 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는 운동가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 청렴성과 가치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와 대학교는 청년층에게 윤리학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 윤리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상이 주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단순히 점수나 순위 혹은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 내 국가는 진정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포괄적인 접근법이 꼭 필요하며 이런 접근법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기껏해야 미미한 개선을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퇴보할 것이다.

②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아프리카 재정의의 시기

- 최근 발표된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에 아프리카연합의 반부패 노력에 좋은 기준선을 제공한다. 올해 아프리카연합의 주제는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 아프리카의 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로”이다. 아프리카연합이 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가 현 상황을 검토하기에 시의적절하다.
- 어떻게 보면 CPI 점수가 아프리카의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한다. 르완다와 카보베르데의 변화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부패가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장기적으로 부패척결 운동에 집중해온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 등은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는 남수단, 소말리아 등은 부패 척결이 여전히 힘든 도전과제로 남는다.

보다 청렴한 대륙에 대한 소망

- 전체적으로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OECD 국가보다 점수가 더 높다. 특히 보츠와나, 세이셸, 카보베르데, 르완다, 나미비아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OECD 국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보츠와나와 세이셸은 각각 61점, 60점을 받아 57점을 받은 스페인의 점수를 상회한다.
-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인 공통적 요소는 지속적으로 반부패 노력에 헌신하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반부패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선도적인 국가들은 법과 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지도자의 자질로서 지침 준수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부터 제도적 투명성을 공개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조지 폰세카 카보베르데 대통령, 이안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의 범정부 부처의 ‘반부패 주류화’라는 혁신적인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이 국가들은 각자의 공동체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했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계획을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 국가는 CPI에서 각각 55점, 55점, 61점을 받았다.
- 마찬가지로 지수에서 긍정적으로 50점을 받은 모리셔스의 프라빈드 주그노크 총리는 향후 10년 안에 국가 점수를 16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로 대담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코트디부아르 및 세네갈의 긍정적인 추세

- CPI 에서 엄청난 개선을 보인 코트디부아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수가 9포인트 상승하여 27점에서 36점을 기록했다. 부패로 사회공동체가 극심한 고통 받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정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첫 임기 때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은 재빠르게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실천했다. 첫째, 부패 척결 및 예방에 관한 법을 통과했고 둘째, 범국가적인 반부패 기관을 설립했으며 셋째,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와 같은 국제적 이행계획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6년간 지수가 36점에서 45점으로 상승한 세네갈의 경우 반부패 노력에 발전이 있었다. 2012년 취임 직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굿 거버넌스 부처 및 연방반부패국(OFNAC)을 설립했다. 또한 세네갈 부정축재 척결 특별재판소(Court for the Repression of Illicit Enrichment)를 재설립했다. 그 후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낮은 점수 국가: 최대 장애물

- 몇몇 국가에서 반부패 노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들은 보통 분쟁국 또는 전쟁 중인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 척결은 특히나 어려운 일이다. 이런 환경에 놓인 정부의 취약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나아가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일부 국가의 지도자의 경우 반부패 공약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부패로부터 자유로움을 선사하겠다고 하였지만 공약은 지키지 않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런 양상은 대륙 전반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현상이며 효과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 일례로 2012년 이후 라이베리아 CPI 점수는 10포인트 하락했다.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정권이 반부패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설리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연고주의, 불법계약, 내각 각료의 면책 관행 등으로 얼룩졌었다.

행동 지침

-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프리카연합은 회원국 지도층에

반부패를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은 이때까지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지수가 가장 낮고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겪고 있는 소말리아 및 남수단과 꾸준한 폭락세를 보이는 말라위와 기니비사우 같은 국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랍국가의 만연한 부패

- 극심한 갈등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민 사회에 대한 공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랍국가에서 부패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런 환경에서 부패 수준을 보여주는 2017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21개 아랍 국가들 중 19개 국가가 50점에 미달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미진한 진척 그러나 전반적인 침체

-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이 올해 지수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 등 많은 국가가 부패 척결, 투명성 및 청렴성 증진에 작지만 긍정적인 진척을 거두고 있다.
- 예컨대 CPI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레바논은 2017년에 정보 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Law)을 통과시킴으로써 작은 진전을 거두었다. 또한 석유, 가스, 광물자원의 곳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기준인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 이와 더불어 레바논 의회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국가예산을 비준했다.
- 반대로 튀니지는 반부패 측면에서 일정 진전을 보았지만 논란이 많은 사면법을 채택함으로써 후퇴했다.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옛 벤 알리 시대의 부패한 공무원에게 사면을 내리고 있다.
-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를 포함하여 지역 내에 부패가 아직도 존재한다. 정제된 점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치 부패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수백만 명의 빈곤한 사람들을 희생하여 사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일삼는 집권 엘리트들의 손아귀에 있다.

- 권력 분립이 되지 않고 강력하고 투명한 공공기관과 책임성 메커니즘이 없다면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제도적 개혁이 단행될 수 없으며, 반부패법과 규정 도입은 단순히 말뿐인 호의에 불과하다.

줄어드는 시민 사회 입지

- 2011년 아랍혁명 이래 지역 내 독재정권은 정치적 이견,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과 시민 사회 단체들을 탄압해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천만하고 위협적인 환경에서는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 작년 이후에 지수가 급락한 바레인 이 이런 사례 중 하나이다. 지난 2년간 바레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2016년 중반 바레인 정부는 야당을 해산시켰고 인권 운동가들을 감금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의 시민권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시민사회와 반부패 운동가들의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심문을 했다.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부재하고 독립적인 부패관리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더해지면서 바레인의 부패인식지수는 폭락했다.
- 이와 비슷하게 이집트와 모로코에서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사회의 참여에 대한 억압이 심해졌다. 최근 모로코 리프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존엄성, 사회 정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종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대응했다. 나아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에서는 반테러 및 사이버범죄 법률 통해 인터넷상 자유로운 발언을 금지했다.

점수 이외 시사점

-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인지 수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는 전체적이고 다양한 부패의 양상을 담아내지 못한다. 일례로 올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전년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아마도 공공 재정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공공 조달과 공공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시킨 덕분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이런 군주국은 시민과 대중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이견 또는 지배 가문에 대한 비판을 억압했다. 양 국가 모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더욱 개방되고 자유로웠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면 시민 사회와 언론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소이다.

지속되는 전쟁과 분쟁

- 지수에서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아랍 국가들,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은 모두 취약한 공공기관, 내적 분쟁, 깊은 불안정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약하거나 부재하여 부패가 더욱 성행하게 만든다. 내전과 분쟁뿐만이 아니라 꾸준한 폭력 속에서 굿 거버넌스의 모든 형태는 약화되고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진정성이 있고 진실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부패한 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랍 국가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시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아랍 국가는 시민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부패에 맞서 싸우는 운동가와 언론인을 보호해야 한다. 반테러 및 사이버 범죄 법과 같은 엄격한 법을 악용해서 정치적 이견을 탄압하는 행위를 종식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이 없으면 부패는 지속적으로 성행할 것이며 지역 내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④ 미주: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인식

- 지난 몇 년간 중남미는 부패와의 싸움에서 큰 성적을 거뒀다. 지역 내 많은 국가에서 법적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민의 반부패 운동이 확산됨과 동시에 부패 척결을 위한 법률 및 기구가 설립됐다. 그러나 미주 지역의 2017년 부패 인식 지수의 점수는 꾸준히 낮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반부패 기반 구축

- 최근 몇 년간 미주 지역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법률과 제도는 확실히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칠레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공공 청렴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바하마도 최근 공공정보 접근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가이아나는 공공 조달에 있어서 투명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또한 자메이카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반부패 기관을 설립했다.

고위급 인사 조사

-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일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미주 지역에서 꾸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오데 브레히트 스캔들로 뇌물수수에 가담하고 공공계약을 대가로 불법 자금을 조달한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등의 기업인과 정치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았다. 과테말라 지방검찰청과 과테말라 반면책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는 현재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의 불법 자금 형성 사건을 포함하여 부패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파나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부패 노력이 정체된 것일까

- 일부 국가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으나 지역 내 전반에

걸친 고착화되고 구조적인 부패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아직도 없다. 반부패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합의를 통해 국가정책을 수립한 경우 상당한 질적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패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 국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부패와의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

-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싸움에서 미주 지역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적 자금, 공공 조달, 독립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도의 강화 등 주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 지침

- 일부 중남미 국가는 올해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와 정당이 구조적 변화 추진에 필요한 부패척결 요소를 정치적인 제안과 플랫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진정한 부패척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를 결집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반부패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유럽 및 중앙 아시아(1부): 시민의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 2017년에 동유럽과 동남부 유럽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여 반부패 노력이 저해되고 시민의 자유는 위협 받았다. 지역 내 비정부기관(NGO)과 언론사는 의사결정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컨대 폴란드에서 정부기관이 비정부기관의 자금 관리 및 분배 업무를 맡았다.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정부는 비정부기관에게 부적절한 신고 조건사항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비정부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비슷한 법이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도 통과되었다.

헝가리 시민참여의 오점

- 2012년 55점에서 2017년 45점으로 6년 동안 지수가 10포인트 하락한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시민사회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헝가리는 비정부기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자선기관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입안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금조달 구조를 빌미로 비정부기관에 오명을 씌우고 부담되는 신고 조건을 부과했다. 그 결과 20개가 넘는 비정부기관이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공격에 처한 우크라이나 반부패 운동가

- 30점을 기록한 우크라이나에서 반부패 운동가, 비정부기관, 부패를 폭로하는 언론인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비방 모략, 불법 조사, 소송, 박해, 구타 등 보복행위는 힘 있는 엘리트층이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상 업무 수행이 힘들 정도로 번거로운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견과 잇따른 정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도한 신고 요구 조건이 아직도 존재한다.
- 국내 및 국제적 이해당사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재판소 설립 또한 지연됐다. 반부패 재판소의 설립이 시급함과 동시에 독립된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으면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적 제도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터키 공공부문 축소

- 2017년 지수에서 40점을 받은 터키에서 지난 19개월 동안 모든 권력 분립이 중단됐으며 법령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동 기간 동안 약 12만 명의 공무원과 법률 전문가는 일자리를 잃었고 공공부문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터기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40퍼센트 이상의 공공조달이 공공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조달 중 28퍼센트는 공개입찰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개되고 공정한 공공조달은 원칙이 아닌 예외사항이

되어 버렸다. 또한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권리가 축소됐다. 작년만 하더라도 70명이 넘는 언론인과 시민사회 운동가가 투옥되었다.

-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예산 지출의 투명성 부족이 매우 심각했다. 총 400억 달러 규모 이상인 모든 터키 공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그 어떤 통계나 활동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터키 국부 펀드에 의해 집행된다. 나아가 국부 펀드 계좌 세부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는 대통령과 총리의 재량기금은 8억 달러 가까이 상향조정 됐다.

이탈리아 일부 진전

- 50점을 받은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7년 점수가 8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서유럽의 평균 점수보다 16포인트 낮다. 이탈리아에서 부패가 여전히 심각 문제로 남아있으며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법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내부고발, 투명성, 부당한 영향력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 4개가 최근에 승인됐다. 비록 이런 법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일부 진전을 시사한다.

과거 성적 우수했던 핀란드 퇴보의 길을 걷다

- 서유럽에서 가장 우려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핀란드이다. 전통적으로 굿 거버넌스의 수호자이자 최고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자랑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으나 2016년 89점에서 2017년에 85점으로 하락하여 올해 점수가 4포인트 감소했다. 공익과 사익 간 모호한 경계선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공직자 일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진 기피해야 하는 문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재산 공개 혹은 이해 충돌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자산 및 투자활동 관련 질문을 피했던 핀란드 국무총리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언론과 정부 사이 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었다.

행동 지침

- 지역적 분석에 따르면 지도층과 정부에 책임을 묻도록 시민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부패에 맞서 싸울 수 없다. 또한 언론이 부정행위를 보도할 수 없다면 아무런 진전이 있을 수 없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정책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며 공동체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유럽 & 중앙 아시아(제 2부):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

- 동유럽 및 중앙 아시아의 지역 분석과 더불어 알바니아, 코소보, 조지아의 추가적인 분석이 해당 국가와 지역 내 반부패 노력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알바니아

- 최근 부패인식지수에서 38점을 받았던 알바니아는 지역 내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사법 개혁을 단행하여 지난 6년간 일정부분 개선이 있었다. 이 기념비적인 성과는 최근 유럽연합(EU)의 확장 전략과 알바니아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 덕분일 수 있다.

코소보의 공허한 부르짖음

- 2012년에 비해 2017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지역 내 3개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코소보는 전반적으로 부패 수준이 여전히 높다. 39점을 받은 코소보의 부패 근절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용이 모호한 어떤 법안도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나 비정부기관과 언론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한다. 시민사회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 진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고위인사 관련 사건 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집행이 약한 조지아

- 발트해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구소련 국가들 중 부패 척결을 선도했던 조지아는 올해 56점을 얻으면서 작년 대비 1점이 떨어졌다.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산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지아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법적 개선이 있었지만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반부패법과 규정이 제한적으로 시행됐고 사법 독립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국가 차원의 발전이 저해됐다. 나아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대한 수많은 부정부패 혐의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차후 몇 년은 정부가 시급한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설립하는 등 필수적인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행동 지침

- 지역적 분석에 따르면 지도층과 정부에 책임을 묻도록 시민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부패에 맞서 싸울 수 없다. 또한 언론이 부정행위를 보도할 수 없다면 아무런 진전이 있을 수 없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정책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며 공동체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청렴성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 출처 : <http://integrity-index.org>

□ 개괄

- (배경) 기존 CPI 등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부패 원인이나 개선방법을 알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월드뱅크나 TI의 부패통제 측정 지수와 상호관계가 있으나, 그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주장.

2017년 IPI 발표 보도자료에서는 “전 세계는 국가별 시간별 부패 측정 도구가 부족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CPI는 전문가 의견의 총합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잘 해 왔으나, 20년이 지나고 몇 번의 조정을 거치면서, 아랍 에미리트(24위)가 슬로베니아(31위)나 이스라엘(28위)보다 덜 부패하고, 카타르(31위)가 스페인(41위)이나 체코(47위)보다 덜 부패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르완다(50위)는 99% 지지율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야당 후보들을 선거부정으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데, 한국(52위)이나 브라질(79위)을 앞서고 있다. 이들 두 국가는 시민들의 거대한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부패로 막 탄핵한 국가들이다.”라고 하면서, CPI의 문제점을 지적

- (목적) 특정 국가의 부패통제 역량을 평가하고 공공 자원이 부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
- (주관) 독일 베를린 소재 Hertie School of Governance,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 소장, 선임연구원 10명, 연구원 5명으로 구성. 2012년 설립
- (후원) 유럽연합의 제7차 연구개발프로그램(Seven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 지표 상세

- 총 109개국 대상 6개 항목에 대한 외부 정량 지수의 항목을 표준화하여 합산한 복합지표. 아래 6개의 지수는 부패를 통제할 수도 조장할 수도 있음. 행정적 부담, 무역 장벽, 예산투명성의 부족은 “공급자 측면”을 반영하여, 국가 예산을 횡령하거나 시민들로부터

갈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한편, 사법부 독립성, 언론 자유, 전자적 시민권은 “수요자 측면”으로 독립 기구와 시민들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부패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부패통제요인임.

1. 사법부 독립성(Judicial Independence): 공정하고 깨끗한 사법 제도를 평가. 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자료에 기반
2.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 자국 내 행정적 규제를 평가. 사업을 시작할 때와 법인세 지불시 필요한 시간과 절차의 횟수를 합친 것으로,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자료에 기반
3. 거래 개방성(Trade Openness): 국가별 대외 경제활동 관련 규제(무역장벽 등)를 측정. 수입수출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의 횟수를 합친 것으로,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자료에 기반
4. 예산 투명성(Budget Transparency): 행정부의 예산절차에서 시민의 접근성을 평가.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Survey 상의 질의에 기반
5. 전자적 시민권(E-Citizenship): 시민의 온라인 제도, 소셜미디어 등의 능력을 측정. 전체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와 페이스북 사용자 수를 측정한 것으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과 Internet World Stats 자료를 기반
6.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평가.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평가에 기반

□ 2017년 결과 (2015년 결과 이어 2번째 발표)

순위	국가명	IPI 총점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거래 개방성	예산투 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의 자유
1	노르웨이	9.79	9.73	9.76	9.53	10.00	9.71	10.00
2	덴마크	9.61	9.08	9.53	10.00	9.36	10.00	9.66
3	핀란드	9.49	10.00	9.60	9.33	10.00	8.24	9.78
4	네덜란드	9.39	9.42	9.56	10.00	8.16	9.43	9.78
5	뉴질랜드	9.26	9.90	10.00	8.26	9.57	9.08	8.76
6	스웨덴	9.24	9.56	9.72	9.89	7.44	9.06	9.78
7	룩셈부르크	9.13	9.11	8.97	10.00	8.07	9.09	9.55
8	영국	9.11	9.29	9.59	9.29	8.93	9.33	8.20
9	스위스	9.07	9.58	9.04	9.27	8.07	8.93	9.55
10	에스토니아	8.93	8.36	9.79	9.98	8.07	8.14	9.21
11	벨기에	8.90	8.38	9.56	10.00	6.79	8.89	9.78
12	미국	8.82	7.64	9.13	9.35	9.79	8.39	8.65
13	호주	8.78	9.19	9.69	7.16	9.57	8.67	8.43
14	독일	8.77	8.13	8.62	9.11	9.79	8.22	8.76
15	캐나다	8.74	9.01	9.86	9.37	6.14	9.08	8.99
16	아일랜드	8.74	9.44	9.74	8.64	7.42	8.10	9.10
17	프랑스	8.73	7.65	9.43	10.00	8.50	8.93	7.86
18	포르투갈	8.38	6.73	9.22	10.00	7.64	7.72	8.99
19	체코	8.37	6.30	8.77	10.00	9.14	7.36	8.65
20	오스트리아	8.33	7.81	8.66	10.00	7.43	7.66	8.43
21	슬로베니아	8.23	5.18	9.25	10.00	9.36	7.17	8.43
22	스페인	8.15	5.62	8.99	10.00	8.71	7.72	7.86
23	코스타리카	8.11	7.50	8.52	7.81	9.31	6.40	9.10
24	한국	8.02	5.44	9.61	8.97	8.50	8.28	7.30
	* 2016년 16위	8.12	5.40	9.34	9.63	8.93	8.14	7.31
25	몰타	7.99	6.65	8.54	8.82	6.14	9.38	8.43
26	라트비아	7.93	5.58	9.50	9.55	8.07	7.03	7.86
27	이탈리아	7.92	5.34	8.90	10.00	8.93	6.85	7.53
28	슬로바키아	7.90	3.73	9.07	10.00	9.15	7.11	8.31
29	리투아니아	7.82	5.84	9.39	9.83	5.93	7.50	8.43
30	우루과이	7.82	8.20	8.81	6.36	7.21	8.11	8.20
31	루마니아	7.73	5.49	8.96	10.00	9.15	6.05	6.74
32	폴란드	7.63	5.22	8.81	10.00	7.64	6.25	7.86
33	헝가리	7.50	4.24	8.91	10.00	7.64	7.72	6.51
34	칠레	7.50	6.94	8.88	8.08	6.14	7.19	7.75
35	크로아티아	7.38	4.22	8.24	10.00	8.71	6.84	6.29

36	조지아	7.37	5.66	9.54	8.40	9.31	5.84	5.50
37	남아프리카공화국	7.37	8.53	8.44	6.17	10.00	4.09	6.96
38	트리니다드토바고	7.30	5.93	8.09	6.91	7.64	7.23	7.98
39	그리스	7.25	5.50	9.18	9.27	6.54	7.40	5.61
40	불가리아	7.22	4.05	8.25	9.86	8.08	6.54	6.51
41	세르비아	7.18	3.68	8.54	9.76	8.50	6.63	5.95
42	마케도니아	6.97	4.14	9.91	9.42	7.64	6.68	4.04
43	요르단	6.90	7.13	8.49	8.56	7.65	6.00	3.59
44	페루	6.70	4.22	8.69	7.22	8.84	5.40	5.84
45	멕시코	6.68	4.18	8.77	8.00	9.14	6.22	3.81
46	말레이시아	6.66	6.59	8.66	7.92	6.57	6.77	3.48
47	필리핀	6.65	5.23	6.97	7.28	8.93	5.44	6.06
48	몽골	6.64	4.32	9.07	8.43	6.79	4.38	6.85
49	나미비아	6.63	7.50	6.97	7.44	7.65	2.94	7.30
50	도미니카 공화국	6.57	3.21	8.69	7.80	8.28	5.16	6.29
51	태국	6.57	5.65	8.49	8.40	8.93	5.60	2.35
52	알바니아	6.55	3.45	8.48	9.62	7.20	5.26	5.28
53	엘살바도르	6.54	4.40	7.76	8.94	7.00	4.50	6.63
54	아르헨티나	6.46	3.73	7.48	6.98	7.86	7.31	5.39
55	동티모르	6.43	4.51	8.95	7.12	7.92	3.03	7.08
56	몰도바	6.40	2.41	9.26	9.66	7.42	4.96	4.71
57	가나	6.40	6.56	8.04	6.61	7.00	2.68	7.53
58	콜롬비아	6.39	3.90	8.92	6.32	8.50	6.01	4.71
59	모로코	6.36	5.14	9.38	8.34	7.00	4.69	3.59
60	과테말라	6.35	4.55	8.70	7.89	8.72	3.73	4.49
61	터키	6.34	4.12	8.89	7.73	8.28	5.99	3.03
62	네팔	6.27	5.82	7.89	8.24	8.07	2.67	4.94
63	카타르	6.26	8.15	9.17	7.07	1.00	8.93	3.25
64	말리	6.25	5.10	8.38	7.90	7.64	1.65	6.85
6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25	3.87	6.34	9.53	6.25	6.10	5.39
66	우크라이나	6.24	2.84	9.22	8.92	7.42	3.98	5.05
67	튀니지	6.18	5.34	8.77	7.10	5.49	5.22	5.16
68	아제르바이잔	6.11	5.07	9.78	8.41	6.57	5.80	1.00
69	말라위	6.06	5.84	7.84	8.15	7.00	1.55	5.95
70	인도네시아	6.04	5.73	7.19	7.68	6.79	3.35	5.50
71	카자흐스탄	5.95	5.52	9.29	7.93	6.57	4.83	1.56
72	스리랑카	5.94	6.24	7.96	7.92	6.58	3.14	3.81
73	브라질	5.83	5.24	3.91	5.71	8.07	6.19	5.84
74	키르기스	5.81	4.48	8.14	7.86	8.29	2.60	3.48

75	러시아	5.80	4.59	9.47	5.15	8.71	5.17	1.68
76	보츠와나	5.77	6.68	7.47	9.17	1.64	3.71	5.95
77	에콰도르	5.75	2.29	6.96	7.63	8.07	5.97	3.59
78	세네갈	5.68	5.05	7.62	6.90	6.57	2.46	5.50
79	케냐	5.68	5.69	8.15	6.70	6.79	2.28	4.49
80	인도	5.60	6.11	7.39	5.20	5.93	2.54	6.40
81	니카라과	5.57	1.90	8.12	7.99	7.22	3.22	4.94
82	이집트	5.56	6.49	8.42	6.31	5.71	4.10	2.35
83	온두라스	5.54	3.90	7.26	6.64	8.50	3.46	3.48
84	우간다	5.47	4.90	7.30	6.86	7.22	1.91	4.60
85	부르키나파소	5.45	2.60	8.30	7.68	6.14	1.59	6.40
86	라이베리아	5.39	5.29	8.87	4.28	7.86	1.58	4.49
87	모잠비크	5.39	3.93	7.64	7.59	5.50	1.86	5.84
88	파키스탄	5.38	4.93	6.92	5.96	8.50	2.19	3.81
89	시에라리온	5.34	3.56	8.12	5.78	8.50	1.00	5.05
90	타지키스탄	5.32	6.33	8.81	7.62	5.71	1.76	1.68
91	베냉	5.32	4.59	7.73	6.83	4.21	1.79	6.74
92	레바논	5.27	4.08	8.45	5.88	1.00	7.50	4.71
93	방글라데시	5.21	3.86	7.44	4.77	8.71	2.31	4.15
94	사우디아라비아	5.05	7.71	8.37	5.83	1.00	6.07	1.34
95	르완다	5.04	7.99	8.88	7.74	1.64	1.86	2.13
96	베트남	4.61	4.84	7.23	7.82	1.43	4.90	1.45
97	잠비아	4.60	5.58	8.52	6.24	1.00	2.14	4.15
98	중국	4.54	5.87	8.25	6.78	1.00	4.13	1.23
99	캄보디아	4.39	3.67	6.46	8.47	1.64	2.84	3.25
100	알제리	4.37	4.73	7.51	4.64	1.00	4.31	4.04
101	나이지리아	4.28	5.32	5.82	3.42	3.57	2.26	5.28
102	볼리비아	4.25	1.74	5.05	8.06	1.00	4.18	5.50
103	앙골라	4.22	2.59	7.63	3.00	7.00	2.09	3.03
104	짐바브웨	4.18	3.88	6.04	6.15	4.21	2.14	2.69
105	미얀마	3.86	3.41	7.61	5.48	1.21	2.67	2.80
106	탄자니아	3.64	5.44	7.24	1.66	1.00	1.70	4.83
107	카메룬	3.38	4.05	7.31	2.07	1.00	2.14	3.70
108	차드	3.14	2.74	5.62	5.52	1.00	1.24	2.69
109	베네수엘라	1.94	1.00	1.00	1.00	1.00	5.60	2.01